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계약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침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해악적이다.

첫째, 정부지침은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노린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관철한 데 이어, 올해 제조·금융 대기업을 필두로 민간부문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조치이기도 한데,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를 지렛대 삼아 임금체계 전반을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심화하면서 임금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지배자들에게 이는 사활적인 과제다.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은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을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악적이다.

둘째, 정부지침은 노동자들을 성과에 따라 줄 세워 고용도 위협한다.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 해고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도 용이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진정한 ‘저성과자’는 박근혜와 기업주들

과거에 KT, 외환·국민은행 등에서 저성과를 핑계로 직무를 빼앗고 특수 부서로 발령 내 퇴출을 압박한 사례들을 보면,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것이 그저 ‘극소수 불성실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 다수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임금 삭감이나 노동강도 강화 같은 공격에 저항하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만 이런 공격 중 일

부는 법적 제약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의 정부지침은 바로 이런 제약을 없애려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지침 강행의 목표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의 이윤을 보전하려고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인건비를 줄이고 상시적 해고를 가능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저성과자’는 수익성 하락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기업주들, 감언이설 공약을 지킨 게 없는 박근혜, 그리고 위기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자본주의 체제다. 노동계약은 자신들의 ‘저성과’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악랄한 공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정부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고 협박하며 탄압을 강화하고 나섰지만(법무장관 김현웅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ISIS 테러와 북핵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황당무계한 소리까지 했다!), 이 투쟁이 실질적으로 조직될 때만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 따위 노동계약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총선에서 심판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고 당장 공세가 계속되는데 총선을 기다리며 투쟁을 본격화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에는 어차피 발표된 지침을 되돌릴 수 없다거나 ‘노동개혁’을 투쟁으로는 막아내기 힘들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국민적 지지 형성에 불리

하다고 보고 파업 같은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투쟁 방식을 회피하고 조합원들을 수동화시키는 것보다 맞물릴 수 있다.

진보정치 세력이 약한 상황에서 선거심판론은 더민주당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더민주당의 거둬들인 배신 행태다. 지난해 말에도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 통과,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삭감 등에 합의했다.

노동 악법 5개를 전부 반대한다더니 얼마 못 가 파견법·기간제법 등 2개만 반대

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이제는 파견법도 협상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런 태도는 더민주당이 (부차적이지만) 기업주들에 기반한 당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고유한 힘을 발휘해 파업에 나서야 가장 효과적으로 박근혜와 맞설 수 있고 나머지 피억압 대중도 자기 주위로 끌어당길 수 있다. 투쟁을 배제하는 ‘정치’야말로 선거 승리도 어렵게 하는 공상이다. 필요한 것은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 투쟁이다.

추천 소책자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증보판
'노동개혁'에 맞선 노동자 투쟁
2015년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김하영 지음 | 노동자연대 |
120쪽 | 4,000원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는 정부지침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는 (1월 24일 현재) 아직 미지수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노동 계약에 맞서 상당한 저항을 했다. 민주노총은 누가 뭐래도 저항의 중심임을 분명히 보여 줬다.

그러나 아쉽게도 총궐기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은 국회 일정의 지연과 함께 다소 탄력을 잃은 듯했다. 정부가 곧 2대 지침을 발표하리란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기층을 미리 대비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주요 산별·노조 지도자들이 민주노총의 결정대로 파업 지침을 내린다면, 주요 부문이 파업에 돌입하고 투쟁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들은 총파업 돌입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노총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민주노총의 결정을 공문구로 만드는 축소 방침 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일궈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하고는, 자신의 조직으로 돌아가서는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도대체 총연맹은 왜 필요한 거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사업장 별 ‘지침 무력화’로 미뤄뒀던 안 된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비교적 빨리 지침을 내렸지만,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지침이 발표되면 “끝장 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금속노조는 실제로는 하루 4시간(주야 2시간) 파업 결정에 그쳤다. 공공운수노조는 쟁의권이 있는 조직이 파업에 참가하기로 정했는데, 지금 쟁의권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부위로서 박근혜가 노동계급 전체에 강요하는 조건 악화에 맞서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 그중에서도 강력한 대규모 노조가 많은 금속노조(특히, 완성차지부)와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운동 안에는 정부지침 강행에 맞서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무력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대선에서 대응하자는 의견이 상당하다. 대규모 노조들의 당면 투쟁 계획이 충분치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노조들이 자신의 단체협약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정부지침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소수 사업장에만 해당할 뿐이다. 수많은 미조직·비정규직, 취약노조 노동자들의 조건도 함께 방어하려면, 민주노총의 조직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나서 정부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대정부 항의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주들이 함부로 지침을 현

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을 외면한 결과 미조직·취약노조 사업장에 지침이 적용되고 이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으면, 결국 조직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총선에 기대를 거는 입장은 진보정당의 현재 세력을 보건대 결국 더민주당에 기대는 것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더민주당은 믿을 수 없다. (관련 글 앞면) 법률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도 효과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법을 우회한 행정지침의 효력을 문제 삼아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역시 세력 관계에 달린 문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spaper.org>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에게 파업지침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작업장 별 대응으로 투쟁을 미루고 분산시키는 것도, 총선에 기대는 것도 정부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

정부지침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지침 폐기를

정부에 요구하며 지배자들의 이윤을 위협하는 강력한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경제적·집단적 힘을 단호하게 사용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의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총파업 지침을 이행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이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그저 형식적인 몇 시간 파업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내는 파업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